



문서번호 사법 2013-0201

수 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화 : 02-3786-3101 팩스 : 02-3786-3110)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beth1004@pspd.org)

제 목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 채택 촉구

날 짜 2013. 2. 6. (총 2 쪽)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요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귀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국민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판단합니다. 표결주장에 앞서 부적격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이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인 유용으로 횡령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공직자로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점도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동료 법률가들로부터 신망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탄식할 정도였다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며, 귀 대표께서도 부적격한 인물임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4.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관여한 사건의 판결례에서도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국민 기본권 보호에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헌법재판소는 155건 사건에서 위헌(취지)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155건 중 절반(77건)의 사건 대해 이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상식에 기반하여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은 철저히 걸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6. 그러한 입장표명과 부적격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 표결 처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새누리당을 비롯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라는 형식논리에 기댄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먼저 분명히 제시해주길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